

#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버넌스 네트워크(GOVNET) 제9차 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DAC) 가버넌스 네트워크(GOVNET) 제9차 회의가 Westreicher 의장 주재로 2.8(목)~9(금)간 파리에서 개최되었음.

계 코드의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task team을 구성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함.

## I. 핵심 내용

- GOVNET은 가버넌스와 능력개발이라는 2개 주제와 4개의 작업분야(능력개발, 반부패, 내국세 수입과 책임성, 인권)를 향후 4년간의 새로운 mandate로 설정기로 함.
- 최근 논의가 개시된 ‘가버넌스와 조세와의 관계’에 대해 task team이 제시한 3개 작업분야를 추진하고 각 분야의 지침을 마련기로 함.

- 개발과정에서 효과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10개 원칙 및 DAC의 행동계획을 담은 “인권과 개발에 관한 행동계획”이 2.15 DAC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임.

- 반부패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가버넌스 평가방법론에 대한 공여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2007년 중 개최기로 함.

## II. 상세 회의 내용

- 개발원조 통계작성에서 가버넌스 지원 부분 특히 민주화, 반부패, 분권화 지원에 대한 통

※ 회의 문서는

<http://www.oecd.org/dac/governance/govnet> 참조

## 1. 의장단 선임 및 GOVNET mandate 수정

### 가. 2007년도 GOVNET 신입 의장단 선임

- 의장에 Eduard Westreicher 독일경제부 가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및 성평등 과장(연임)
- 부의장에 Sanjay Pradhan IMF 과장(연임)
- Tarik Khan 캐나다 개발원조청(CIDA) 과장(신임) 선출

### 나. GOVNET mandate 개정 :

#### Room Document 3

- DAC 산하기구는 2007년 3월/4월까지 DAC에 수정된 mandate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사무국은 개정안을 제시
  - 2001년 GOVNET의 최초의 mandate에는 good governance 및 capacity development가 포함되었고, 2003년 mandate에는 부패, 인권, 민주주의를 추가
- 사무국은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채택, 파트너 국가의 참여 추세, 원조의 확대, 개발이슈 분석상 가버넌스의 중요성 점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4년간 GOVNET의 새로운 mandate로 다음의 목적과 작업주제를 제시

- GOVNET의 목적과 주제로 가버넌스와 능력개발을 설정

- 4가지 작업분야(work streams)로 능력개발, 반부패, 내국세 수입과 책임성(domestic revenue and accountability), 인권을 제시

- 회원국들은 상기 목적과 작업주제의 추진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mandate 문안은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사무국은 이에 따라 조정된 문안을 제시기로 함.

- 프랑스, 벨기에 등은 good governance 보다 democratic governance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호주 아일랜드 등은 democratic governance의 의미에 대한 수원국의 입장, 그 의미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할 사안이며, good governance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 non-DAC OECD 회원국의 DCA 산하기구 참여와 관련, 당관 정인균 참사관은 Alexandra Trzeciak-Duval 정책조정과장에게 DAC mandate에는 non-DAC OECD 회원국이 DAC 및 그 산하기구의 모든 회의에 참여(participate)할 수 있다는 footnote가 포함되어 있으나, WP-EFF를 제외한 여타 DAC 산하기구 mandate에는 그러한 추가 없음을 지적함.

- 그러한 각주가 없더라도 non-DAC OECD 회원국의 DCA 산하기구 회의 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나, DAC mandate와의 일치를 위해서 동일한 각주를 DAC 산하기구 mandate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동 과장은 금번 DAC 산하기구 mandate 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내 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함.

## 2. 조세와 책임성(taxation and accountability) : Room Document 4

최근에 구성된 GOVNET의 '책임성 및 조세 Task Team'은 GOVNET에서 새로이 다루기 시작한 분야인 "가버넌스와 조세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개의 작업을 제안함.

- 국가와 시민간 관계 ('the social fiscal contract')
  - 시민의 조세에 대한 효과적인 교섭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개발
- 건전한 조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내 관계 및 조세 개혁에 있어 유관기관 간의 정치
  - 정부내 관계 및 조세 개혁의 정치관련 지침 개발
- 능력 및 조세행정
  - 조세 및 세입 행정을 위한 능력발전 지침의 개발

다수의 회원국들은 task team이 제시한 3개 작업을 대체로 지지하였으며, 조세와 가버넌스의 문제는 민주적 절차의 문제, 부패문제,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화 이슈와 같은 관심 있는 이슈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함.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유럽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중점 연구 대상지역으로 할 것을 주장함.

의장은 아프리카 지역부터 우선 작업을 시작키로 하고, task team이 5월말에서 6월초 까지 동 의제에 대한 작업결과를 DAC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3. 가버넌스 지원 부분에 대한 통계보고 : Room Document 5

캐나다 개발원조청(CIDA) 통계전문가(John Lobsinger)는 가버넌스 관련 통계 작성에 있어 DAC CRS 코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캐나다의 보완적 조치를 설명함.

- DAC CRS상에는 민주화 지원, 반부패 및 분권화 지원분야가 누락되어 있고, 시민사회 분야 및 공공분야 개혁 코드에는 혼란이 있으며, 현재의 가버넌스 분야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드의 세분화, 관련항목 신설 및 항목간 조정,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를 위해 task team을 구성하여 작업할 것을 제안함.

- 이와 관련, 개발협력국 통계과 측은 현재 CRS 코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등 항목을 이미 포함하였다고 설명하고, 코드 세분화에 있어 너무 세분화 되면 기술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부연함.

능력개발과의 관계, ③ 비공식제도와 민간부문 개발과의 관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음. 공여국과 수원국이 어떻게 하면 비공식제도가 보다 개발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함.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캐나다가 제안한 가버넌스 관련 통계 분류 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task team을 구성기로 하였는바, 캐나다, EC, 독일, 영국이 참여 의사를 표명함.

사무국은 비공식 제도에 대한 DAC에서의 작업방향과 관련, 비공식 제도를 수평적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기존의 작업분야(work streams)에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작업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은 GOVNET 작업시 비공식 제도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

#### 4.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에 관한 개발센터와 GOVNET 합동세미나 결과 : COM/DCD/DEV(2007)2

사무국은 2006.12.11-12 개최된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에 관한 개발센터와 GOVNET 합동세미나 결과에 대해 보고함.

- 전통, 관습, 사회적 규범 등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는 개발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여 왔으며, 개발을 촉진하는지 혹은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등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음.

- 세미나에서는 ① 비공식 제도와 성평등과의 관계, ② 비공식 제도와 가버넌스, 책임성 및

- 비공식 제도와 GOVNET 주요 주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 반부패 : 비공식 제도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 능력개발 : 비공식 제도의 capacity 측면
- 인권 : 비공식 제도가 전통적 및 비공식 사법 제도 역할 수행
- 조세 : 비공식 조세 혹은 비공식 분야의 조세 측면을 설명

## 5. 인권과 개발(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DCD/DAC(2007)15, Room Document 6

사무국은 2.15 DAC 회의에서 채택될 ‘인권과 개발에 관한 행동계획’ (Action -oriented Policy Paper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함. 동 paper는 지난 1.18 DAC 특별 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함.

- 동 정책문서는 최근의 인권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공여국의 경험 등을 반영하여,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10개 원칙을 제시
- 또한 DAC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행동계획으로 ① 10개 원칙의 적용 유도, ② 인권담당 부서와 개발담당부서 간 대화 및 협조 촉진, ③ 인권 평가 및 지표의 강화에 있어 전문성의 원천으로서 역할 수행 등 3개 사항을 제시
- 사무국은 향후 파리선언의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2008.9 가나의 Accra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급 포럼(HLF)에 보고서로 제출 예정임을 설명함.

회원국들은 동 행동계획 정책문서를 지지하였으나, 10개 원칙에 대해서 각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국가는 인권

지표의 개발에 관심을 보임.

## 6. 반부패(Anti-corruption) : Room Document 7

반부패에 관한 task team은 2007-2008년 작업계획으로 다음 4개의 작업분야(work streams)를 제시함.

- 정치적 부패 : 고위급의 부패에 해당되며, 개발에 파괴적인 효과를 주고, 자원배분의 왜곡, 시민과 정부간 연결 침식, 정부의 이성적 개발 정책 수행 능력저하를 초래
- 공동 부패 평가 : 국가단위의 부패평가 사업과 가버넌스 평가방법론에 참여하는 사업 등 2개 사업 추진
- 가버넌스 악화 상황에 대한 공통 대처 원칙 : 파트너 국가의 가버넌스 악화 상황에 대한 공여국의 조화된 공동 대처 원칙의 개발(2007 HLM에서 논의 예정)
  - 추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여국의 개입에도 초점
- 부패의 공급 측면 대응 : OECD 뇌물작업반과 협력

다수의 회원국은 task team의 작업계획에 지지를

표명하였음. 다만 일부 회원국은 반부패 평가가 가버넌스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일본, 독일 등은 신흥공여국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7. 가 버 넌 스 평 가 (Governance Assessments) : Room Document 8

사무국은 가버넌스 평가를 위해 ① 2007년에 가버넌스 평가방법론에 대한 공여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 개최하고, ② 2008년에 원조공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가버넌스 평가방법론에 대한 toolkit나 sourcebook을 발간할 것을 제안함.

다수 회원국이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가버넌스 평가 방법론 회의 개최를 지지함에 따라 동회의 개최 준비그룹을 구성키로 하였으며,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영국, 독일, 호주, 화란, UNDP 등이 이에 참여키로 함.

- 가 버 넌 스 평 가 관 련 자 료 로 EU의 ‘governance profiles’ 과 UNDP의 sourcebook을 공유키로 함.

## 8. 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 : Room Document 9

사무국은 능력개발에 관한 DAC의 논의 및 여타

산하기구 담당직원과의 협의를 기초로 2007-2008 능력개발에 대한 작업계획을 제안함.

- 2005-2006년간 능력개발에 대한 작업결과는 2006년 봄 DAC에서 채택한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에 담겨있음.

- 능력개발은 DAC의 2007-2008 PWB 우선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GOVNET의 능력개발에 대한 작업 mandate가 갱신되었으며, 보다 전략적으로 수평적인 작업을 진행할 필요에 따라 여타산하기구와 협조하에 DAC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Table 1)과 핵심 국가기능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Table 2)를 제시함.

회원국들은 GOVNET이 능력개발에 대해 DAC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능력개발에 대한 task team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작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능력개발에 대한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DAC의 지침을 받기로 함. .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